

광주·전남 통합,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 '속도전'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개소로 본격 실무 작업에 착수 주민투표 땐 500억 이상 비용·시간 필요…지방의회 동의로 빠른 추진 의회가 반대하거나 진통 길어지면 '7월 출범'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기사 3면>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과 시간, 논란이 예상되는 주민투표 대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의 키(Key)는 시·도민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이날 각각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개소하고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통합 절차의 핵심인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 절차를 밟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면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즉, 법적으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원칙이며, 주민투표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인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통합에 있어 주민투표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수억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준비와 실시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2026년 7월 통합 출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행정통합을 선언한 대전과 충남 역시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의 관건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얼마나 원만하게 이끌어내느냐다.

강훈식 실장 "지방선거 때 광주·전남 통합 단체장 가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대통령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오는 9일) 오찬 이후 큰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 실장은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까지 지역통합과 관련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 지역 모두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주민투표를 생략하는 만큼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과 권한이 막중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거나 논란이 이어지면 '7월 출범'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침해당한 전남도의회의 반응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시도 통합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속도전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행정통합을 신속하게 매듭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친반 논쟁이 과열될 수 있는 주민투표보다는 의회 동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샘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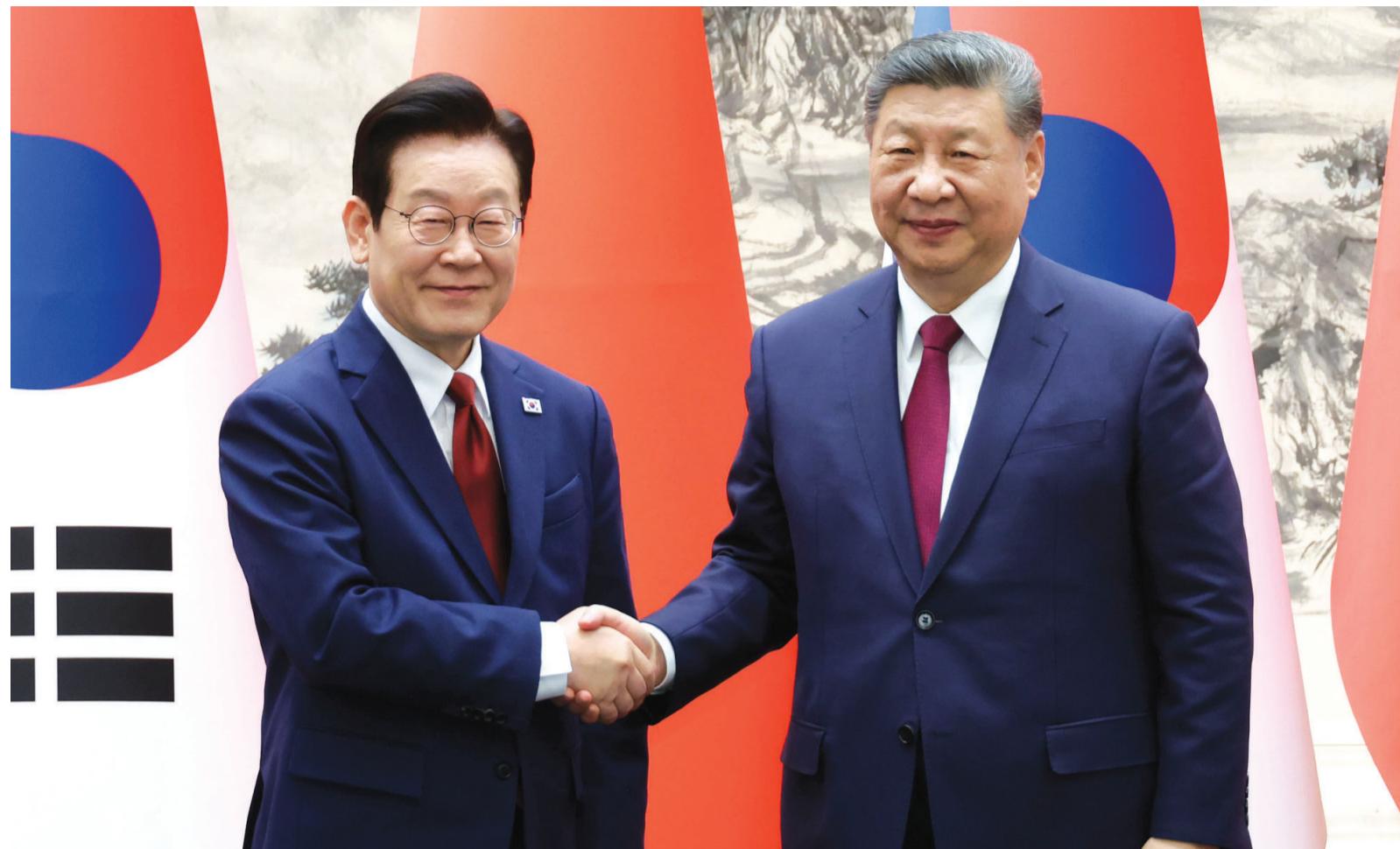
광주시와 전남도의 향후 통합 타임테이블도 촘촘하다. 광주시는 6일 오전 광주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통합 추진 방안과 향후 일정을 설명한다.

이어 8일에는 민·관·정의 목소리를 담아낼 '행정통합추진협의회'를 킥오프(Kick-off)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김영문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강위원 전남도경제부지사 등 4명을 공동단장으로 국회 의원, 시의원, 교육청, 자치구, 시민단체, 경제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통합의 비전과 목표, 통합 법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광주전남조광역 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보완 의견도 제시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법적으로 주민투표가 필수는 아니지만,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주민 직접 참여 없이 결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결국 시·도의회가 민심을 어떻게 읽고 판단하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관계 전면복원…한반도평화 대안 함께 모색”

이 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해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오늘 만남은 저와 시 주석님 모두에게 별오년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리면서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을 것"이라며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만난 지 겨우 두 달이 지났는데,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을 만나는 것 처럼 반갑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금골드키위' 상표 도둑 내몰린 농민들 ▶6면

팔도 건축기행 - 강원 강촌역 ▶18면

페퍼스 '절치부심'…승점 사냥 나선다 ▶22면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취업률 1위
76.4%

(2024년 대학정보공시, 일반대학+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 기준)

서영대학교
SEOYEONG UNIVERSITY

www.seoyeong.ac.kr